

'97주요업무계획

보건환경국

목 차

I. 일반 현황	627
II. '97 업무추진방향	628
III. 주요업무추진계획	630
1. 보건의료시혜 및 위생기능 확대	631
2. 환경보전기반 확립	634
3.물관리행정의 강화	641
4. 환경분쟁의 효율적 대처	648
IV. 참고사항	649

I. 일반 현황

- 조 직 : 5 과 (15 계) 1 사업소 101 명 (본청 87명)
- 주요기능 : 환경관리 및 지도, 수질관리, 보건의료, 위생관리

□ 예 산 : 총 581억원 (도예산의 6.3%)

- 회계별 - 일반 558억원, 특 별 23억원
- 재원별 - 국고 399 " , 지방비 182
- 기능별 - 환경관리 188억원(32%), 수질관리 343(59%), 보건위생 50(9%)

□ 주요관리대상시설

- 환경기초시설 : 42개소 (하수, 오.폐수, 분뇨처리장등)
- 쓰레기매립장 : 32 " (위생 8, 단순 24)
- 배출업소 : 2,453 "
- 상수도시설 : 2,327 " (일반 58, 간이 2,269)
- 먹는샘물업소 : 27 " (허가 14, 수원개발허가등 13)
- 계곡수 보호대상 : 78 "
- 하수도시설 : 2,211 Km
- 보건진료기관 : 273 개기관 (보건소, 보건지소, 진료소)
- 의 약 업 소 : 1,727 개소 (병의원 802, 약업소 925)
- 위 생 업 소 : 35,794 " (공중 6,260, 식품 29,534)

II. '97업무 추진방향

□ 보건환경행정여건

- 주민소득증대 및 고령화에 따른 성인병증가 및 건강관심증대
- 환경문제와 관련한 지방행정수요 복잡·증대추세
 - 수질, 대기, 토양오염방지 추진등 관련업무 폭증
 - 먹는샘물, 지하수개발 허가, 폐공대책 및 분쟁증가
 - 「아젠다 21」등 국제환경협약 이행 관련업무 처리
 - 시·군간, 주민간 각종 환경분쟁 발생증대
- 「삶의 질」 향상에 대한 주민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음

□ '96 성과 및 교훈

- 저소득주민과 노년층을 위한 한방진료실 설치, 암건진사업등을 전개하고 환경보전중장기계획 수립, 계곡수보호시책추진 등을 통한 환경보전기반을 더욱 다져 주민들로 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고 사료되나
- 중앙부처와 주민들의 지역실정 이해부족등으로
 - 문장대, 용화온천개발 저지 문제
 - 먹는물관리법 개정등 제도개선문제
 - 광역 쓰레기매립장 건설문제등은 크게 진전되지 못하고 있음

□ '97업무추진방향

○ 충북 정도21세기 첫해를 맞아 2천년대에 걸맞는 보건환경기반을 다지는데 더욱 노력

- 보건의료시혜 및 위생기능 확대
- 환경보전실천과 청정환경조성 기반강화
- 환경수요 증가에 따른 환경용량 확충
- 물관리행정의 강화

○ 사후처리의 행정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앞서 해결하는 선제행정 수행

- 사전예방 차원의 업무처리
- 불합리한 제도 및 관리방법의 전향적 개선
- 주민의 실질적 도움이 되는 새로운 시책발굴 추진
- 점증하는 새로운 환경수요에 적극대처

⇒ 150만 도민의 『삶의 질』 향상에 주력

III. 주요업무추진계획

1. 보건의료시혜 및 위생기능 확대

- 1-1 보건의료시혜 확대
- 1-2 위생행정의 개선 및 단속강화

2. 환경보전 기반확립

- 2-1 『청풍명월 충북21』 수립
- 2-2 토양환경보전 철저
- 2-3 환경기초시설의 확충
- 2-4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대책
- 2-5 자동차 배출가스 상설 광역단속체계 확립
- 2-6 민.관공조 감시 자연환경보전
- 2-7 도민과 함께 하는 환경행정

3. 물관리 행정의 강화

- 3-1 깨끗하고 안전한 맑은물 공급
- 3-2 먹는샘물관리 행정의 개선
- 3-3 산간계곡수 보존대책 추진
- 3-4 지하수 보전관리대책
- 3-5 하천 수질관리개선
- 3-6 저수지주변 정화운동 전개
- 3-7 광역상수도시설 확충

4. 환경분쟁의 효율적대처

1. 보건의료시혜및위생기능확대

1-1. 보건의료시혜 확대

- 농촌지역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노후화된 시설및 장비 현대화
- 지역간 의료시혜 불균형해소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

□ 전국처음 보건소 한방진료실 설치 운영

- 실질적 진료기능의 강화로 질높은 의료서비스 제공
 - 도내 13개소 (보건소 12, 증평보건지소 1)
 - '97. 1월부터 진료실시
- 대한 한의사협회 충북지부의 지원을 받아 주 1~2일 진료

□ 보건의료기능 강화

- 보건진료기관 시설확충
 - '96년도 착수사업 7개소 1,589백만원(국비)
 - 보건소시설 및 장비보강(옥천, 영동) 612 "
 - 보건지소 신증축(충주금가, 옥천청산, 이원) 495 "
 - 보건지소 시설보강(단양 영춘, 어상천) 482 "
 - '97년도 사업 : 보건복지부에서 7월경 확정
-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확대
 - 대상지 26개 보건지소중 9개소 설치완료
 - '97계획 9개소 423백만원 (도비, 시군비 각 50%)

□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확대

-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 실시(본인부담금 경감) 110천명
- 이동순회진료사업 활성화
 - 보건소당 공중보건 의사 증원 배치 (1→2명)
 - 노인정, 의료취약지 마을 등 현지방문 무료진료(연중상시)
- 자궁, 유방암, 저소득층 암검진사업 : 28,855명
- 노인성질환 및 성인병 증가에 따른 방문보건사업 전개 : 14,000명

□ 사전예방적 도민건강증진 시책 추진

- 금연 및 흡연구역 지정관리 : 1,233개소
- 충치예방을 위한 상수도 불소화사업 : 1개소(옥천)
- 영유아 예방접종사업 : 175천명
-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: 17,482명
- 모유 수유권장 및 성교육 상담강화 등

□ 전염병 예방 철저

- 방역취약지 중심 방역소독실시(672개소) : 56회
- 질병 정보모니터망 위촉운영(병의원, 약국, 리통장) : 1,627명
- 예방접종실시(일본뇌염외 3종) : 187천명
- 장티푸스 보균자 찾기사업 : 72천건

1-2. 위생행정의 개선 및 단속강화

- 국민이 마음놓고 먹을수 있도록 식품의 안전관리와
-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통한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

□ 위생접객업소 불법영업행위 단속

- 취약지역별 담당책임제 지정 운영
- 무허가업소 및 상습 고질업소 중심의 단속방법전환(전산화관리)
- 接客업소의 건전영업 자율실천 유도
-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단속 실시
 - 도내 일제단속 : 월 2회 이상(특명기동단속 : 수시)
 - 시.군교차 합동단속 : 월 1회 이상
 - 시.군 상설기동단속 : 주 1회 이상(청주시 주 2회이상)

□ 국민건강위해식품 근절

- 식품 제조.가공.판매.운반업소등 점검강화 (대상 8,070개소)
- 민.관 합동단속으로 단속의 신뢰성 확보 (월 1회)
- 유통식품점검및 다소비식품수거검사(국민기본식품 170개제품등)
-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실시 (47개 품목)
- 수입식품관리 전산프로그램 개발 활용

□ 위생접객업소 건전육성

- 위생접객업주 교육 : 13,500 명
-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 확대실시 : 20억원(식품진흥기금)
 - 식품제조업소 3 → 5천만원 이하 (67% 증)
 - 식품接客업소 1 → 2천만원 이하 (100% 증)

2. 환경보전기반확립

2-1. 『청풍명월 충북21』 수립

— 21C 장기전략 환경프로그램 개발 —

- UN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강조와 지속 가능한 개발실현을 위한 『지방의제 21』작성 권고에 따라
- 전도민이 동참하고 실천할 수 있는 미래환경에 대한 비전 제시와 환경목표등의 설정

□ 사업 개요

-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향하는 도민의지천명(충청북도 환경선언)
- 충청북도의 바람직한 환경비전과 목표제시
- 도민, 단체, 기업체, 공공기관등의 역할 및 행동강령 마련

□ 그동안 추진상황

- 세부추진계획수립 : '96. 9. 25
- 추진방안 협의를 위한 각계대표자 간담회개최 : '96. 10. 11
- 충북개발연구원과 용역계약체결 : '96. 11. 28

□ 추진 계획

— 공청회, 간담회등을 수시개최 民意 수렴반영 —

- 충청북도 환경선언문 선포 : '97. 6. 5 (환경의날)
- 『청풍명월 충북21』 수립완료 : '97. 12월
- 『청풍명월 충북21』보고서 유엔제출 및 실천운동 전개

2-2. 토양환경보전 철저

- '95. 1. 5 제정된 토양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라
- 공장폐수, 유류, 유독물등의 관리소홀 및 사고등으로 인한 토양오염이 우려되지 않도록 방지대책 강구

□ 추진 방향

- 주기적인 오염도조사로 오염변화예측 및 대응
- 오염우려시설 개수 및 방지책강구 오염 최소화
- 오염유발시설 관리 및 점검강화

□ 추진 계획

- 토양오염측정망 지정 및 오염도검사
 - 도내 140개 지점, 년 1회 이상 실시
 - 오염도 측정 및 검사기록 유지분석
- 토양오염유발시설 및 주변 토양오염도 측정(위반업소 행정조치)
 - 석유류, 유독물 판매·저장시설 (년 1회)
- 휴·폐금속 광산지역 오염예방
 - 광산별 오염도측정 및 우려광산에 대한 방지사업 추진
- 비지정 토양오염 유발시설 오염예방
 - 오염가능 대형시설의 특별관리(지역별, 유형별 관리카드 제작)

2-3. 환경기초시설의 확충

- 산업화, 경제규모의 팽창등에 따른 오염물질 급증
- 환경기초시설의 지속적확충으로 오염물질의 효율적 처리

□ 추진 방향

- 시설 입지선정시부터 주민참여 및 사전예고로 주민반발 해소
- 관련시설등과 연계처리방식으로 효율성제고
- 기존시설의 노후화 및 용량부족 자치단체 우선시행

□ 추진 계획

- 폐기물 위생매립장 — '98까지 설치완료 목표
 - '96 착공사업 : 3개소 (청주 광역, 괴산, 옥천)
 - '97 신규사업 : 2 " (충주 광역, 단양)
 - ┌ 사업량 : 153천 m²
 - └ '97사업비 : 7,049백만원
(국비 3,460, 도비 588, 시군비 3,001)
- 청주권 대단위 쓰레기소각장 건설
 - 규모 : 200톤/일
 - '97사업비 : 13,894백만원 (국비 4,168, 시군비 9,726)
 - ※ 청주, 청원군발생 생활쓰레기 소각
- 분뇨처리장 건설 — 4개소 (청주, 제천, 보은, 금왕)
 - 시설용량 : 950 kl/일
 - '97사업비 : 8,032백만원 (양여금 5,622, 시.군비 2,410)

2-4.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대책

-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시책을 적극 개발 추진
- 날로 심화되고 있는 쓰레기문제를 슬기롭게 해결

□ 음식물쓰레기 감량화

-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, 자원화 시범지역선정 추진(3개 시.군)
 -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수거봉투및수수료 차등화 검토추진
- 퇴비화, 사료화 수용처 확대추진
 - 시.군별 1건이상 재활용 특수시책 발굴 추진
- 초.중.고등학교 및 각종 훈련기관을 통한 교육확대와 음식문화 개선운동 지속적 전개
-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사업 시군평가 → 예산차등 지원

□ 생활쓰레기 재활용 확대

- 농촌지역 폐농가를 재활용품 수집보관장소로 활용(5,928동)
 - 재활용품 가격변동에 따른 수급조절 기능효과 거양
- 종교단체등과 연계한 「3대 환경보전실천운동」 전개
 - 참여단체 : 천주교, 기독교, 불교, 유교, 여성단체등 5개단체
 - 실천사항 : 음식남기지않기, 1회용품 사용안하기, 물아껴쓰기

□ 건축폐기물처리 개선방안 강구

- 건축 폐기물의 처리장 확인제도 시행

□ 지정폐기물 처리대책 마련

- 도내에 폐기물처리장 설치방안을 신중히 검토

2-5. 자동차배출가스 상설광역단속체계 확립

-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체계의 상설화, 광역화 등 획기적 단속체계의 개편을 통해 청정대기 환경보전

□ 추진 방향

- 도, 시, 군단위 분산단속체계에서 도단위 광역단속체계로 전환
- 일과성 단속체계에서 연중 상시단속 및 감시체계로 개편
- 단속인력 및 장비의 전문성, 전담반 보강운영

□ 추진 계획

- 관리대상 : 298,534 대 ('96.12.31 현재)

- 승 용 : 199,617 대 - 승 합 : 21,502 대
- 화 물 : 76,017 대 - 특 수 : 1,398 대

- 단속방법

- 계획단속에서 무제한 단속(연중계속)으로 전환
- CO/HC측정기등에 의한 정밀검사와 비디오 카메라단속 병행
- 오염비중이 높은 대형자동차, 노후한 영업용등 집중단속
- 매연추방 환경운동 및 안전, 경제운전 홍보활동 병행

- 인력 및 장비의 전문화 보강

- 인 력 : 1개반5명 고정배치(일반직 1, 기능직 2, 공익요원 2)
- 장 비 : 전용차량(1)
- 소요예산 : 14,400천원 (단속활동비)

2-6. 민.관공조 감시 자연환경보전

- 민, 관, 기업체등이 협조하여 자연환경보전 및 복원
- 민간의 자율감시기능 강화로 환경오염행위 근절
- 정직, 친절, 청결의 새기상창조 도민운동과 연계추진

□ 자연보호운동 추진 내실화

- 자연학습교육 강화 : 10천명, 현장체험 및 수련
- 자연보호지도위원 교육 및 자율활동지원 : 120명
- 자연보호시범학교 육성 : 21개교
- 자연보호유공자 선정 시상, 선의경쟁유도 : 36명
- 행락질서 및 환경보전계도용 홍보물 제작배포

□ 민간자율감시 및 참여

- 민간자율감시체계 구축
 - 『푸른환경지킴이』운영 활성화 (4,616명)
 - 『어린이 환경봉사원』활동지원으로 환경실천인육성(9,187명)
 - 『환경신문고』운영 : 128 특수전화 자동응답체제 구축
- 기업의 자율참여에 의한 지역환경관리
 - 기업스스로 지역환경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프로그램개발, 운영
 - 폐수 10% 줄이기, 1사 1하천 정화운동 등 지속추진

□ 공해배출 및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

- 홍보, 계도와 병행한 강력한 지도.단속 실시

2-7. 도민과 함께하는 환경행정

- 환경문제는 "내일이면 늦는다"라는 각오로 지혜를 모아
- 도민들의 환경보전실천과 자연존중의식이 생활화되도록 유도

□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환경홍보

- 환경보전 홍보엽서 발행
 - 정보통신부에서 제작. 판매하는 우편엽서활용 (10만매)
 - '97. 1월부터 도내 112개 우체국에서 판매개시
- 『충북그린카드』보급 확산 — 회원사 은행과 협조추진
- 다양한 환경보전행사 개최
 -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'97세계환경의날 행사를 기념하고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개최

□ 환경보전교육의 내실화

- 현장체험 도민환경교육실시 (1,500명)
- 환경관리인 및 배출업소 대표자교육 (960명)
- 지역사회교육과 연계 환경교육 실시
 - 노인대학, 주부교실, 민간단체주관, 각종교육 활용

□ 환경관련단체운영 활성화

- 환경정보(자료)교환, 환경보전실천 도민운동 전개
- 환경단체 상호간 또는 도와 환경단체간 협력체제 구축

□ 언론기관과의 환경보전 공조체제 유대

- 환경관련 자료교환 및 지원
- 언론사별 환경관련 기획보도 및 대담방송등 실시

3. 물관리행정의 강화

3-1. 깨끗하고 안전한 맑은물 공급

	'95	'97	'99
· 보급율	63.7%	68.0%	73.4%
· 급수구역	56개소	69개소	79개소
· 급수인구	919천명	1,045 천명	1,188 천명
· 시설용량	430천톤/일	495천톤/일	567천톤/일

□ 수돗물에 대한 도민의 불신해소

- 취수원별 수질등급목표 설정. 관리
- 민.관공동 수질검사 및 검사결과 공표제 운영
- 수돗물에 대한 불신요인 파악 개선대책 강구

□ 맑은물 공급시설의 정비확충

- 사업량 : 기존시설의 개량 및 확충 (10개 시군)
 - 노후관교체 16.7 Km, 배수관 확장 3 Km
 - 배수지 확장 2개소, 취.정수시설 4개소
- 사업비 : 60억원 (교부세 20, 도비 20, 시군비 20)

□ 농촌 생활용수공급 확대

- 대상지역 : 20개 면지역 ('94~2004까지)
- '96까지 추진 : 5개소 (청원 2, 영동 1, 괴산 1, 단양 1)
- '97 추진 : 4개소 (제천 금성, 보은 내북, 옥천 군북, 진천 문백)
 - 규모 : 5,300톤/일
 - 사업비 : 34억원 (농특세 17 교부세 17)

3-2. 먹는샘물관리 행정의 개선

- 먹는샘물 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와
- 제조업체의 행정지도. 관리강화로 먹는샘물관리 행정의 효율성 제고

□ 관련법령 정비. 개선방안 강구

- 먹는샘물관리체계 정비 (법개정 조기추진)
- 방치된 폐공관리를 위한 조치내용 등

□ 기존 먹는샘물 제조업체 지도. 관리 강화

- 기동 지도조사반 상시운영(도) : 1개반 7명
- 허가조건이행 준수여부 지도. 감독 철저
- 정기 또는 수시 먹는샘물 수질검사(원수, 제품수)
- 업체주변에 대한 철저한 피해상황조사 및 대처로 민원해소

□ 신규허가 신청업체에 대한 처리방향

- 신규허가는 최대한 억제 원칙
- 다만 당해 시장. 군수와 시. 군의회, 주민이 모두 희망할 경우 지역실정을 감안 허가여부를 신중히 검토
 - 허가신청에 대한 제반심사 강화
 -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조사 철저 이행

3-3. 산간계곡수 보존대책 추진

- 우리나라도 2001년부터 물부족현상 도래 예고
- 산간계곡수 보존관리기반이 완전히 갖추어 지도록 노력

□ 보존 목표

— 계곡마다 맑은 물이 흐르는 청풍명월 고장 구현 —

- 자연그대로의 맑은 생명수로 보호, 관리
- 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미래 자산으로 요긴하게 활용

□ 추진 계획

- 보존대상지역 : 78개지역 계곡수
 - 보존가치가 있는 계곡수를 매년 추가지정관리
- ※ 오염이 되었지만 수량이 풍부한 계곡수에 대한 되살리기사업 검토
- 계곡수 보호, 관리체계 확립
 - 명예감시원 위촉 자율감시 (시, 군 조례제정)
 - 유관기관, 학교, 사회단체, 기업체등의지원체계 구축
 - 정기적인 수질검사(년1회 이상)로 청정수 유지
- 오염행위단속 및 휴식년제 실시
- 계곡수의 효용도를 높이기 위한 자연환경보전사업 병행추진
 - 계곡수에만 서식하는 열목어, 산천어등을 인공부화 방류
- 오염방지사업 추진:사업비 1,056백만원(도비 529, 시군비 527)
 - 안내간판 및 차량차단시설 78개소
 - 출입억제 시범사업(야영장, 체육시설, 주차장등) 6개소

3-4. 지하수 보전관리대책

-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억제와 지하수공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오염의 최소화
- 물사용 급증으로 인한 2천년대 물부족사태에 효율적 대처

□ 지하수 관리체계 불합리 및 문제점

- 무분별한 개발, 이용확산에 통제기능 결여
- 불법, 불용시설(미신고, 폐공) 방치로 오염확산
- 주민들이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 폐공협조등 기피
- 공장, 농촌아파트의 자가 지하상수도개발등과 관련한 분쟁증대

□ 지하수 보전관리 개선방안강구

- 지하수 개발이용실태 전수조사관리
- 지하수 고갈 우려지역에 대한 부존량조사 및 대처
 - 청원 미원, 초정지역 (군비 730백만원 투자)
- 국회에 상정된 지하수법 개정추진과 연계한
 - 개발시공업체 관리강화 (등록제 도입)
 - 무분별한 개발, 이용통제 (신고, 허가제 도입)
 - 폐공 원상복구 의무화 (복구비 예치제 도입)
 - 지방 지하수영향심의회 운영 등

□ 기구보강 및 인력증원

- 시군별 물 전담부서 신설추진 : 1개 계

3-5. 하천수질관리 개선

- 소득수준향상과 산업화에 따른 하천수질 오염심화
- 지방재정 열악으로 막대하게 소요되는 하수처리, 하수도시설 사업등은 자체추진 곤란

□ 하천 수질관리 강화

- 도내 주요하천에 대한 수질을 정기적으로 측정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수질측정망 운영 (31개소)
- 산업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한 상시단속
 - 환경관련정보(자료)제공 및 상담과 업체교육 병행 실시
- 하천수질오염행위 계도 및 지도. 단속강화(공익근무요원 활용)
- 하천 자정능력 향상을 위한 하천정화사업 추진 : 4개소
(4,107백만원)

□ 하수도시설 정비확충 (보급율 65.2 → 67.1%)

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년차적 추진(2005년까지) -

- 총계획 3,388 Km ('96까지 추진 2,211Km)
- '97계획 60.7 Km 20,237백만원
(양여금 10,109, 도비 95, 시군비 10,033)

□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(처리율 52.2 → 79.1%)

- 시설규모 225천톤/일 (10개소)
 - 계속사업 179 " (7 ")
 - '97신규사업 46 " (3 ")
- '97투자비 54,728백만원 (양여금 19,572, 도비 9,671,
시군비등기타 25,485)

3-6. 저수지 주변정화운동 전개

- 주민들의 생활·농업용수를 저수·공급하는 저수지가 공장입주및 무분별한 낚시행위등으로 배출되는 오수, 오물로 오염의 심각
- 더 늦기전에 오염방지대책 강구 및 범도민운동 전개 필요

□ 실태 및 문제점

- 도내 저수지현황 : 866개소 (시군 661, 농조관리 205)
- 행락객, 낚시꾼의 무분별한 오물투기
- 저수지주변의 생활하수, 공장, 축산폐수의 유입
- 감시, 관리체계의 미흡

□ 추진 계획

- 관리체계 재정비
 - 저수지별 관리책임기관 지정운영(시·군, 농조)
 - 낚시터관리인, 명예환경감시원등의 교육 및 임무부여
- 보호관리시설물 설치
 - 낚시안내, 오물투기금지, 수자원의 용도등에 관한 안내입간판
 - 휴지통, 쓰레기장, 간이화장실등 설치 및 지정
- 오염행위 단속 및 정화활동 전개
 - 오물, 쓰레기투기, 공장 및 축산폐수 무단배출, 불법어로행위 등의 정기 또는 수시단속
 - 자연환경 파괴와 수질보전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등에 대한 단속확행
 - 홍보 및 계도활동과 부유물, 쓰레기수거등의 정화활동 전개
- 추진일정 : 실태조사 2월, 보전대책 및 지침시달 3월까지

3-7. 광역상수도시설 확충

구 분	대청댐 II단계	총 주 댐
시설용량	98만톤/일(청주44, 충남54)	25만톤/일
급수구역	청주, 청원, 충남지역	충주, 진천, 괴산, 음성, 증평
사업기간	'95 - '99 (5개년)	'94 - '98 (5개년)
사업비	3,172억원(청주권 1,339)	1,290억원
시행청	한국수자원공사	대전지방국토관리청

□ 그동안 추진상황

- 대청댐 II단계 : 종합진도 5%
 - 오송신도시, 오창과학산업단지 건설등 수요증가에 따라 건설교통부와 협의 청주권역사업을 우선시행기로 확정
 - . 정수장 확장 : 25 → 44만톤/일
 - . 취수장 이전 : 문의면 상장리→현도면 하석리 조정지땀내
 - 사업실시설계완료, 사업착공 '96. 10. 16
- 총 주 댐 : 종합진도 21%
 - 취수장, 정수장, 도수관로공사 착수 ('95년도)

□ '97 투자계획

(단 위 : 억 원)

구 분	계	'96까지	'97	'98 이후
계	2,629	684	551	1,394
대청댐 (1차)	1,339	91	359	889
총 주 댐	1,290	593	192	505

□ 향 후 전 망

- 대청댐 II단계(1차) : '99년 준공예정 (소요공기 30개월)
- 충주댐 광역상수도사업은 순조롭게 추진중임

4. 환경분쟁의 효율적 대처

수년간 계속되고 있거나 신규로 발생되고 있는 환경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

□ 환경분쟁 현황

- 문장대. 용화온천개발저지와 관련한 경북도및 지주조합과의 분쟁
- 먹는샘물개발. 제조업 허가와 관련한 주민과의 마찰
- 댐주변지역 피해와 관련한 문제
- 쓰레기매립장, 분뇨처리장등 혐오시설의 설치반대와 관련한 분쟁
- 공장폐수, 축산폐수, 아파트건립에 따른 일조권침해 등 각종 공사와 관련한 분쟁

□ 대응 방향

- 각 분쟁사안에 대한 문제요인을 정밀분석하여
- 법령개정등을 통한 제도적장치 마련과 격의없는 대화를 통한 적극적인 해결방안 모색
 - 분쟁 발생요인을 미리 파악하여 선제조치로 분쟁발생 차단
 - 솔직한 대화로 당사자 이해설득 조치
 - 정상적인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는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

IV. 참 고 사 항

1. 문장대·용화온천 개발저지
2. 청주 광역권 쓰레기매립장 설치
3. 환경관련법령 개정 건의 추진

1. 문장대. 용화온천 개발저지

□ 상주시와 지주조합측 동향

- 대통령 공약사항 및 법절차상 문제가 없는 사업이라 주장
- '96. 12. 27 국무총리 현장방문 이후 자체경비원을 두고 본격적으로 공사 추진

□ 중앙관계부처 동향

- 국무총리 현장방문시 "양지역 시장, 군수, 의원, 주민들이 협의 해서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자"는 의견제시 이후 별다른 동향이 없음
- 내무부는 포철의 오수처리시설 견학(11. 22)을 주관하고 중재를 시도하였으나 우리 도대책위의 불참으로 중재 유보
-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서 충북측이 신청한 환경분쟁 착수('96. 12. 26. 1차협의)

□ 최근 개발저지 활동상황

- 흑한기 불구 청천지역주민 현장저지활동 전개
- 온천개발저지 서명운동 전개 (35여만명 징구)
- 사법적 대응수행
 - 용화 지구 : 행정소송, 헌법소원 계류중
 - 문장대지구 : 행정소송, 위헌법률 심판청구 계류중
- 환경분쟁 조정신청에 대한 대응자료 준비
 - 온천오수 상주지역 월수문제 타당성검토 및 환경영향조사중

□ 향후 대응계획

- 도대책위등 민간단체와 긴밀히 협조 온천개발이 중지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음

2. 청주광역시권쓰레기매립장 설치

- 위치 : 청주시 수의동, 청원군 강내면 학천리 산83번지 일원
- 사업면적 : 152,847 m² (매립량 972천 m³)
- 사용기간 : 10년 정도
- 소요사업비 : 13,500백만원 (국비 4,284, 지방비 9,216)

□ 그간 추진상황

- '91.10.30 광역 쓰레기매립장 건설 및 운영협정(청주, 청원)
- '92. 7 월 기본계획, 타당성조사, 환경영향평가완료(환경부)
- '92.12. 2 폐기물매립장 설치승인(환경부)
- '94.12. 5 그린벨트내 행위허가승인(건설교통부)
- '95. 4.27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(충청북도)
- '95.11. 7 광역 쓰레기매립장 추진합의(도지사, 시장, 군수)
- '96. 5. 2 관련주민 선진지견학 실시(휴암동 주민 35명)
- '96.10.16 토지 및 지장물 미수령자 토지수용 결정
- '96.12.20 공사착공(반대주민 공사저지활동)

□ 전망 및 향후계획

- 일부주민의 공사방해등 반대활동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
- 유관기관과 협조 법에 따라 대응하여 공사추진
- 대단위소각로 설치사업 병행추진 (200톤/일)
 - '97예산 13,894백만원 확보(총사업비 27,240백만원)

3. 환경관련법령 개정건의 추진

□ 관계부처 처리상황 및 동향

① 지하수법(건설교통부)— '97. 1. 13 공포(시행 '97. 7. 13)

- 지하수개발허가 및 신고제, 개발착공 및 준공검사제도, 원상복구 의무화 및 이행보증금 예치, 시·도 지하수영향조사기관 지정 및 지방 지하수영향심사위원회 운영, 개발업자등록제도 등 도입

※ 공개념제도, 원수대 징수등은 미반영

② 먹는물관리법(환경부)—국무회의 대기중

- 수원개발허가 규제강화, 원상복구비예치 내용은 반영 되었으나
- 『주류, 청량음료등』에 대한 수질 개선부담금 부과는 관계부처 합의를 조건으로 하여 차관회의에 통과 되었는바 재경원, 통상산업부가 계속 반대하고 있어 국무회의 상정이 지연되고 있음

③ 자연환경보전법(환경부)—'97 임시국회 상정 추진중

- 개정법률안 관계부처 2차 협의중
- 우리도 건의내용 반영
 - 국가에서 지정한 지역이외 보호, 보존지역 지정. 관리권한 자치단체 위임

④ 환경영향평가법(환경부)—'96. 11. 20 국회 상정 (본회의 계류중)

- 환경영향협의내용을 배출허용기준으로 강화(협의기준초과시 부담금부과제도 신설)

⑤ 자연공원법, 지방자치법(내무부)

- 지방자치법 : '96. 11.20 국회 상정(내무위원회 계류중)
 - 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의결기능 강화(독립성이 보장된 위원회)
 - 총리소속하에 협의조정기구 설치(중앙과 자치단체간 갈등조정)
- 자연공원법: 추후개정시 참고회신('96.9.11) - 내수면어업금지등

⑥ 댐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(건설교통부) — 국회 제출준비

- 국회건교위 청원심사소위에서 우리도 청원법률안 심사 ('96. 12.12)결과 건설교통부에서
 - 우리도 의회 댐특위에서 청원한 법률안을 토대로 모든댐에 대해 적용하는 법률안을 마련하여 '97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함
- 경기도 출신 의원 중심으로 추진중인 팔당·대청호 주변지역 지원법률안 제정은 신한국당에서 보류

□ 향 후 계 획

- 중앙관계부처의 법률개정 추진상황 수시 파악하여 적극대처
- 국회소관 상임위의원들과 협조 건의안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